

경제관리조직들의 책임과 권한의 합리적설정에서 나서는 중요문제

허 광 진

경제관리조직들의 책임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사업은 사회주의경제관리기구체계를 개선완성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중앙행정경제지도기관으로부터 지방행정경제지도기관과 기업소, 그에 소속되어있는 단위와 성원들의 책임과 권한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명확한 행정조직적분담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모든 성원들이 자기 위치에서 맡겨진 책임을 다할수 있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5권 80페이지)

경제관리조직들의 책임과 권한의 분담관계는 사회주의경제관리조직의 구조와 직능의 기초로 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책임과 권한의 분담관계는 국가의 통일적인 지도를 실현하는 과정에 이루어지는 책임과 권한의 분담관계이며 그 집행에 대하여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분담관계이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책임과 권한은 국가경제기관체계에 망라된 경제관리조직들의 책임과 권한, 경제관리조직단위안에서 부서들의 책임과 권한, 경제관리활동에 참가하는 때 개인의 책임과 권한을 내용으로 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책임과 권한의 분담관계는 첫째로, 국가경제관리기구체계에 망라된 경제관리조직들의 책임과 권한의 분담관계로 나타난다.

경제관리조직단위에 따르는 책임과 권한의 분담관계는 책임과 권한의 종적인 분화관계를 반영한다. 다시말하여 나라의 경제사업전반을 통일적으로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국가가 자기의 책임과 권한의 일부를 각급 경제관리조직단위에 위임하고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관계이다.

우리 나라에서 내각은 당의 령도밑에 나라의 경제사업전반을 통일적으로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내각은 책임과 권한의 일부를 위원회, 성들과 도인민위원회에 위임하고 부여하며 위원회, 성과 도인민위원회는 내각에서 자기에게 위임하고 부여한 책임과 권한의 일부를 아래경제관리조직들(련합기업소, 시, 군인민위원회, 직속기관과 기업소)에 다시 위임하며 기업소들은 부여된 책임과 권한의 일부를 직장에 위임하고 부여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이 중앙으로부터 말단집행단위에 이르기까지 종적으로 분담된다.

이로부터 경제기관, 기업소와 같은 경제관리조직단위전체가 지닌 책임은 국가앞에 지닌 책임인 동시에 웃단위경제관리조직앞에 지닌 책임으로 되며 매개 경제관리조직들에 부여된 권한은 국가와 웃단위경제관리조직이 부여한 권한으로 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책임과 권한의 분담관계는 둘째로, 경제관리조직단위안에서 관리기능에 따라 전문화된 집단전체의 책임과 권한의 분담관계로 나타난다. 이것은 주로 책임과 권한의 횡적분담관계를 반영한다.

실례로 공장, 기업소라는 경제관리조직단위안에는 계획부서, 생산지도부서, 기술관리부서, 노동행정부서, 자재관리부서, 후방공급부서, 재정회계부서와 같이 관리기능에 따라 전문화된 부서가 조직되어있으며 거기에 해당 관리일군집단이 배치되어 활동한다.

경제관리부서의 책임과 권한은 국가의 법규범에 의하여 규정되기때문에 그것은 결국 국가앞에 지닌 책임이며 그의 권한은 국가가 부여한 권한으로 된다.

경제관리조직단위안에서 경제관리부서들사이에는 직접적인 종속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관리부서들의 책임과 권한의 분담관계는 책임과 권한의 횡적인 분화관계를 반영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책임과 권한의 분담관계는 셋째로, 경제관리활동에 참가하는 때 개인의 책임과 권한의 분담관계로 나타난다.

국가경제관리기구체계에 망라되어 경제관리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일정한 직위를 가지며 그 직위에는 해당하는 직무가 주어진다.

일정한 직위를 가진 사람이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자면 그에게 일정한 권한이 주어져야 하며 그 권한은 직무의 성격에 따라 규정되고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 국한된다.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때 개인에게 주어지는 책임은 다같이 중요하지만 경제관리조직단위의 사업을 행정적으로 책임진 지휘관들의 책임이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각급 경제기관, 기업소의 행정지휘관들에게는 해당하는 경제관리조직단위의 경제활동전반을 장악하고 통일적으로 조직지휘할 책임이 주어지며 그렇게 할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책임과 권한의 분담관계는 사회주의경제관리기구체계의 구조와 직능을 규제하는 기초로 된다.

그러므로 경제관리에서 책임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해나가야 사회주의경제관리체계가 개선완성되어나갈수 있다.

경제관리에서 책임과 권한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자면 책임과 권한의 분담에서 나서는 원칙적요구와 현실적조건을 다같이 고려하여 책임과 권한의 분담관계를 검토분석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

경제관리조직들의 책임과 권한의 합리적설정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아래단위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는 원칙에서 책임과 권한의 분담관계를 검토분석하고 개선하는것이다.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아래단위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을 옳게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기본문제의 하나는 중앙과 지방, 기관, 기업소들의 책임과 권한을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과 현실적조건에 맞게 바로 규정하고 철저히 집행하여나가도록 하는것이다.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아래단위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킬데 대한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은 내각을 비롯하여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를 담당수행하는 중앙경제지도기관과 그에 소속된 지방, 기관, 기업소들사이의 호상관계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당의 령도밑에 국가가 나라의 경제를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는 중앙경제지도기관과 지방경제지도기관, 그아래 공장, 기업소들로 이루어지는 각급 경제관리조직단위들을 편성하고 이 단위들을 통일적으로 움직여 나라의 경제를 지도관리하게 된다.

경제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는데서 기본은 내각이

경제사령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것이다.

내각을 비롯한 중앙경제지도기관들은 틀어쥔것은 푹푹히 틀어쥐고 아래를 철저히 장악통제하며 지도방조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경제건설의 환경과 조건이 매우 류동적인 성격을 띠는 오늘 중앙경제지도기관이 지방과 아래기관, 기업소들의 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세부에 이르기까지 다 틀어쥐고 지도하는것은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를 진실로 강화하는 것으로 될수 없다.

변화되는 환경과 조건에 맞게 실제적으로 중앙집권적지도를 강화하려면 중앙경제지도기관이 사회경제발전의 전략적과제해결에 력량을 집중할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의 분담관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성, 중앙기관들은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공업을 비롯하여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경제부문과 단위들을 직접 틀어쥐고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당면한 생산문제는 전적으로 련합기업소가 책임지고 진행하게 하며 련합기업소의 자립성이 확고히 보장될 때까지 성에서는 성안의 협동생산과 다른 성, 중앙기관들과의 련계보장 등의 문제를 맡아 지도방조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들은 자기의 책임과 역할에 맞게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지표들, 국가적으로 반드시 틀어쥐고 해결해야 할 중요지표들만 계획화하고 그밖의 지표들은 해당 경제기관, 기업소와 지방들에서 계획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관리조직들의 책임과 권한의 합리적설정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경제기관, 기업소와 일군들사이에 동지적협조와 단결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책임과 권한의 분담관계를 검토분석하고 개선해나가는것이다.

우선 종속관계를 가지는 경제기관, 기업소의 경제관리일군들사이에 책임과 권한을 분담하는데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원칙을 정확히 구현하여야 한다.

우가 아래를 도와주는 원칙은 웃기관의 경제지도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가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생산의 실태를 알아보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풀어줄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를 정확히 구현하여야 관료주의, 형식주의를 성과적으로 극복할수 있으며 동지적협조와 단결을 공고발전시킬수 있다.

또한 웃기관, 웃사람이 책임을 더 많이 지고 아래기관, 아래사람들은 책임을 적게 지도록 하며 특히 생산자들은 생산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기관, 기업소와 관리부서사이 그리고 관리일군들사이에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면서도 호상협조를 강화할수 있게 의무와 권리를 푹푹히 규정하여야 한다.

책임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규정하여 그 한계가 확연하게 갈라지게 하여야 직무태만, 책임회피, 월권행위와 같은 부정적현상을 극복할수 있다.

책임한계만 따지면서 련관된 경제기관, 기업소와 경제일군들사이에 서로 협조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책임과 권한분담에서 서로 협조할 의무와 그러한 협조를 요구할수 있는 권리를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제관리조직들의 책임과 권한의 분담관계를 바로 설정함으로써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현실적요구에 맞는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어 모든 경제기관, 기업소들이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